

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32
------	-----

2022. 9. 23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8월 29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9.23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정수용 기획조정실장)

1. 제안이유

- 연구결과의 공개시점을 연구용역 종료 후 ‘지체없이’ 로 명시하고,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술용역의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 ‘지체없이’ 로 명문화(안 제4조제1항).
- 나.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
(안 제5조제2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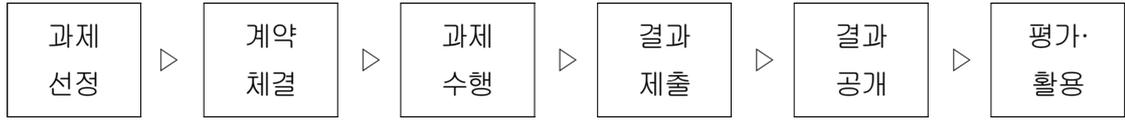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시점을 단축하고, 적극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제출됨.

나. 서울시 정책연구용역 현황 및 입법 배경

-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정책이나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‘학술연구용역’ 또는 ‘정책연구용역’ (이하 ‘연구용역’)을 활용함.
- 정책연구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제 선정, 계약 체결, 과제수행, 결과 제출, 결과 공개, 연구결과 평가와 활용의 순으로 진행됨.

< 연구용역 관리과정 >



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‘행정효율규정’)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‘정책연구관리시스템’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(제54조제2항).
- 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)는 이미 2019년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·조사·검사·평가 등의 다양한 연구용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차단하고 예산 절감과 연구 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노력해 왔음.
- 최근 5년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시 연구용역의 평균 공개율은 90.3%임.

<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현황 >

공개 여부	구분	계		공개		비공개	
		개	(%)	개	(%)	개	(%)
서울시연구과제		299	(100%)	270	(90.3%)	29	(9.7%)

- 그러나 연구용역 과제의 일관성 없는 관리와 원활하지 못한 정보 공유로 인해 유사·중복 용역 수행은 물론, 정책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

활용도 저하 등으로 예산낭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- 이에 개정안은 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을 지체없이 ‘정책연구시스템’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출됨.

다. 개정안의 세부 내용

(1) 정책연구용역의 공개(안 제4조제1항)

-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 공개 시점을 ‘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’에서 ‘종료된 후 지체없이’로 변경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<u>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</u> 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. ②~③ (생략)	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----- ----- <u>종료된 후</u> <u>지체없이</u> ----- ----- ②~③ (현행과 같음)

- 이는 「행정효율규정」에서 연구결과 등을 ‘지체없이’ 공개하도록 한 규정(제54조제1항)과 일치되게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것임.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제54조(정책연구의 공개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
2.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
3.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
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

-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용역을 공개하는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인 프리즘(PRISM)을 통해 계약내용, 연구결과 보고서, 평가 및 활동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음.
-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연구용역 관리 규정이 없는 등 연구용역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태임.
- 이에,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‘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’ 을 권고함(2020. 8.).

< 국민권익위원회 ‘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’ >

과제 구분	세부 내용	대상기관
①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사 과제를 반복하여 수행하지 않도록 과제 심의 전 검증을 거치도록 명시 ☞ 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 	지방자치단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객관적인 과제심의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비율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☞ 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 	지방자치단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과제,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인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☞ 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 	지방자치단체
②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용역 관리법령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☞ 「행정 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 	행정안전부

과제 구분	세부 내용	대상기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 담당관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 ☞ 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 	지방자치단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증을 수행 -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 ☞ 「연구용역 관리 조례」 제·개정 	지방자치단체
③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결과, 평가 및 활용상황을 공개하도록 근거 마련 ☞ 「연구용역 공개 조례」 제·개정 	지방자치단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 - 비공개 사유와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 ☞ 「연구용역 공개 조례」 제·개정 	지방자치단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결과 등 공개 촉진을 위한 시스템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, 공개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 ☞ 「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개정 ☞ 「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」에 반영 	행정안전부

-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의 공개 시점을 앞당겨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타당함.
- 다만, 연구용역 공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와 활용상황 점검 등의 공개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법 보완이 필요함.

(2)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 적시(안 제5조제2항)

- 개정안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정보공개법’)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연구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공개하도록 하고,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집행기관의 정책·시책·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공개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행기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삭제></p>

- 이는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만 제외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·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연구결과의 공개시점을 연구용역 종료 후 '지체없이'로 명시하고,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술용역의 공개시점을 연구종료 후 '지체없이'로 명문화(안 제4조제1항)
- 나. 부분공개 규정과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(안 제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2. 6. 9.~2022. 6. 29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”를 “종료된 후 지체없이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② 집행기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집행기관의 정책·시책·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공개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) ① ----- 종료된 후 지체없이 -----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비공개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집행기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.</p> <p><삭제></p>

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조례의 내용을 상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통일하는 것으로, 비용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이 없음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담당관 김대식(02-2133-7827)